

# 한국 민주화의 주도세력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

## 1. 도입

현대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발전 혹은 지체의 문제는 여전히 정당, 정치집단, 정치제도, 정치가, 국민의식 등과 연관되어 설명된다. 한 때 근대화, 혹은 자본주의적인 산업화가 진척되면 도시의 교육받은 중간층이 성장하게 되고 이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주요한 세력이 된다는 가설이 우리사회에 풍미한 적이 있다. 철차적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의회민주주의 활성화 등으로 집약되는 민주화는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도시 중간층의 적극적인 선거참여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것이다.<sup>1)</sup> 이것은 제3세계, 동아시아의 산업화, 혹은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형성이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의 그것과 같은 양상을 지닌다는 이른바 '근대화론'(modernization theory)의 이론적 전제 위에 성립해 있다. 한편 1980년대 남미의 민주화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이행' 혹은 '민주주의 공고화'(democratic consolidation) 논의는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전자와 별다른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민주화 과정에 미치는 구조/행위자의 상호작용을 다차원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주의 공고화(democratic consolidation) 논의 역시 국가의 전략적 프로젝트, 혹은 지배블럭 내의 행위자의 선택과 타협을 중시하고 있어서 민주주의의 구조적 기반인 계급관계, 계급역량의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sup>2)</sup>

---

1) 박광주, "국가와 시민사회-중간층 헤게모니를 중심으로", 준봉 구범모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편집위원회, {전환기 한국 정치학의 새 지평}, 나남, 1994.

따라서 민주화, 혹은 민주주의 공고화 문제를 노동계급의 정치적 역할과 연관하여 설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민주주의는 권력관계라고 보는 이들 시각은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연계되는데, 그 방식은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을 강화시키고 상층 지주계급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3)</sup> 즉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것은 단순히 자본주의 산업화, 혹은 시장경제가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의 모순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경우 자본가는 오히려 민주주의의 확대에 장애가 된다고 보는 점에서 기존의 시각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으나 반대로 자본가 계급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위협받지 않아야 민주주의가 공고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자본 = 민주주의로 보는 마르크스주의적 민주주의 이론과도 거리를 두고 있다. 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데, 이들은 중간계급은 민주화에 대해 이중적이지만, 노동자계급과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을 때 민주주의에 호의적이었다고 본다. 결국 사회 불평등과 계급관계가 민주주의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는 점에서 이러한 시각은 구조/행위자 이분법의 틀로 보면 후자를 중시하고 있으며 행위자를 단순한 국가 내 정치적 분파로 국한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국가 중심적인 접근과 차별성을 갖고 있다.<sup>4)</sup> 그러나 한국에서 전두환 정권 붕괴 이후 지난 15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과연 “민주주의 이행기를 지나 공고화 시기에 진입하였는가”라는 질문을 회의적으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거의 선진자본주의 국가 수준으로 고도로 도시화되고 산

2) 70년대 말 이후 Linz, O'Donnell & Schmitter, Przeworski 등이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주도하였다. 전략선택이론은 민주화를 기본적으로 권력블럭과 반대세력 간의 내부동학으로 설명한다. 결국 민주화는 권력블럭과 민주화세력의 타협의 문제로 집약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도적 절차적 민주화를 넘어서는 민주화, 혹은 민주주의의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게 된다.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개념이 대단히 큰 한계를 갖는 것도 이점과 관련되어 있다.

3) 루시마이어 외, 32쪽

4) 민주화 이행에 대한 기존 연구는 구조론적 접근/행위론적 접근, 국가중심적 접근/사회중심적 접근의 4차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윤상철, 1997:14를 참고.

업화된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정당, 선거, 정치제도, 조직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굴절과 지체 현상은 더욱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흔히 산업화와 정치문화의 괴리로서 이러한 껍을 설명하는 경향도 있고, 심지어는 문화적 전통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제한한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도 있지만 87년 이후 민주화를 진척시키려는 많은 국내의 노력들이 어떻게 좌절되었는가를 살펴보면, 그러한 설명들은 일면적인 설득력만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화가 저지, 지체되는 것은 분명히 첨예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긴장을 수반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는 명백한 힘의 충돌이 존재한다. 즉 우리는 87년 6월 항쟁 당시의 직선제 개헌에서 최근의 '의문사위원회'의 활동 종료 전에 이르기까지 민주화가 분명히 제도 도입의 문제, 의식의 변화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권에서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의 국가적,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진입과 참여의 방식 혹은 참여의 수준 문제라는 점을 점점 확인하게 된다.

결국 우리는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상관성, 특히 계급 혹은 시민사회 내 중요 사회적 범주의 정치 사회적 역량의 문제에 다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기존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쟁점은 민주화에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중간층(계급) 혹은 노동자계급의 역량, 그리고 민주주의에 가장 심각한 반대세력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주, 자본가등 지배계급의 저항력 문제로 집약해 볼 수 있다.<sup>5)</sup>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중간층(계급), 혹은 노동자계급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의 문제는 80년대 이래 중요한 정치적, 운동론적, 학술적 화두였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한국에서도 민주주의 혹은 민주화 문제는 이제 단순한 정

5) 일찌기 립셋(Lipset)은 중간계급이 상층과 하층간의 정치적 갈등을 완충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이들이 안정된 정치적 민주화에 기여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루시마이어 등(1992)은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간에는 단선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계급의 태도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부의 이질성을 안고 있는 중간계급의 역할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노동계급의 힘이 강하지 않은 제3세계 국가의 민주화에서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본다.

치적 문제 혹은 '제도와 의식'의 변화 문제로 왜소화되었다. 사실 의식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 너무나 막연하고, 제도라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면 너무나 안이한 접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이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사례에 속하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오늘날 투표권과 정치권력의 교체가능성이 이렇게 확대된 조건에서도 선거참여, 혹은 정치참여의 기초가 되는 정보의 공개, 절차적 투명성, 의사결정에서의 민주성, 권력의 책임성, 약자와 소수자의 참여권, 표현과 결사의 자유 등이 심각하게 굴절을 겪고 있는 현상들을 살펴보면 의식과 제도 아래 움직이는 세력관계의 동학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이것은 곧 87년 전후의 한국 민주화 운동이 어떤 세력의 힘에 의해서, 어떤 세력의 반대 속에서, 그리고 어떠한 역학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바로 그러한 역학이 오늘의 민주주의의 진척에 어느 정도로 제약조건이 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민주화운동에서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의 역할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이들의 역할 정도가 이후의 민주화에 미친 결과는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 볼 때 한국 민주화에서 계급세력적 변수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 2. 한국의 국가/시민사회 및 중간계급과 노동계급

루시마이어 등이 주장하듯이 민주주의는 분명히 통치권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권력을 획득한 사람들에게 의해 성취되었다.<sup>5)</sup> 그리고 그것은 대체로 투쟁과 집단적 동원을 통해 성취된 것이다. 그렇다면 권력 엘리트에 독점되어 있던 의회, 정당, 각 정치제도 내에 새로운 세력이 진입해온 한국사회에서 그 동안은 민주화 '운동'이 민주주의의 확대, 심화 과정에서 가장 큰 추진 동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sup>7)</sup> 민주화는 집합적 동원, 사회운동, 선거, 혹은 여론의

6) 루시마이어, 95쪽.

형성 등의 힘을 통해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사회운동, 직접적인 정치참여, 정당 활동 참여, 혹은 선거 시 집합적 행동 등에 참여하는 집단을 하나의 계급, 계층으로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이익집단 혹은 무정형의 대중, 이들을 대표하는 세력이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계급, 계층론적 각도에서 한국 민주화를 접근한 가장 대표적인 예는 70, 80년대의 민중론 관련 논쟁들, 그리고 80년대의 사회구성체론을 들 수가 있다. 기존의 논의는 대체로 중간층(중산층 혹은 중간계급)의 적극적,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과 중간층의 기회주의와 보수성을 강조한 시각으로 크게 구분된다. 전자의 입장에 선 경우는 한국의 중간층이 친민중적이라고 보면서 정치변동기에 이들이 민주적 세력으로 활동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입장은 여러 가지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중간층은 서구의 부르주아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중간층의 정치는 안정성과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sup>8)</sup> 그러나 후자의 경우 중간층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에 입각한 경우는 드물고 주로 이론적인 입장이 판단을 압도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점에서 이론, 혹은 이론 이전의 판단이 압도하는 이 점은 전자의 경우에도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중간계급의 정치적 역할은 노동계급의 등장과 별개로 진행되지 않는다. 즉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의 역량 혹은 역할은 빈 공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그리고 시민사회 내부의 집단, 계급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 한국에서

7) 최장집(2000)은 한국에서 '운동'이 민주화의 중요한 추진 동력이 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실 권위주의 정치문화가 오래 지배하고, 정치적 진입의 관문이 차단된 한국과 같은 후발국가에서 운동 외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신장시킬 수 있었는지는 회의적이다.

8) 한상진(한상진, 1988)의 중민론, 한완상/권태환/홍두승의 중간층 형성론(1987) 등이 전자에 속한다면, 최장집(1985), 서관모(1988), 박현채, 조희연(1991) 등의 입장은 후자에 가깝다. 구해근(1995)은 주변부 사회의 중간계급의 특성을 지적하면서 이들이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노동조합의 조직화는 노동자의 잠재적 이익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노동자가 정치적 민주주의 혹은 더 나아가 사회적 민주주의에 집합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을 획득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노동조합의 조직화 그 자체는 여전히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정치와 사회의 분리, 즉 이익이 정치화되지 않는 상태를 지속시킬 수 있다. 한국과 같이 노동조합이 기업 단위로 파편화된 상황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물론 민주주의로부터 이익을 얻는 세력은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추진세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것은 생산의 영역에서 추상적 개념이다. 만약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이 단기적 경제적 이익을 얻는 대가로 민주주의의 성취를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후자를 포기하고 전자를 택할 수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혹은 어떤 민주주의가 건설되는가의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앞에서 강조한 ‘불만과 요구, 혹은 이익의 사회적, 정치적 구성’의 문제이며, 그것은 국가와 시민 사회의 거시적 구조 및 관계에서 기인한다. 자본주의 세계체제 하에서 외생적 자본주의 발전을 거친 나라에서는 개인주의, 혹은 시장경제가 외부로부터 주어지고, 겔러(Gellner)가 말한 것처럼 비서구사회 일반이 그러하듯이 ‘시민사회’(Civil Society)라는 것은 서구와 대단히 다른 양상을 지니게 된다. 특히 한국처럼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국가간 체제 내에서 패권국의 직접 정치적 종속 상태에 놓인 국가에서는 식민지 국가권력 혹은 독립 후의 국가권력이 위로부터의 부르주아 혁명을 추진하게 되고 지배계급의 대내적 자율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부르주아 사회의 경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중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지배집단은 시민사회에 근거를 두지 않고서 지위를 획득해 왔다는 점, 이익갈등이 계급갈등의 성격보다는 지위갈등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sup>9)</sup>, 한국의 시민사회는 민주화의 추진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화의 ‘결과’로서 발생했다는 점(한홍구, 2001)을 생각해 본다면 한국의 민주화에서 중간층(계급), 노동계급의 역할은 국가/시민사

회의 틀을 전제한 이후 검토되어야 한다.

한국의 미성숙한 부르주아는 유럽, 혹은 남미의 후발국가의 경우처럼 토지귀족들과 결합하지는 않았지만 국가관료 즉 국가계급과 직접 결합하였다. 따라서 오랫동안 국가는 자본가의 역할을 대행하였으며, 시민사회 내부의 차별성을 압도하였다. 노동계급이 일방적으로 배제된 상태에서 모든 형태의 저항운동은 재야세력, 학생들과 일부 도시 중간계급이 주도하였다. 이러한 주도성은 노동계급이 경제활동 인구 구성에서 중심적 집단으로 성장한 80년대 중반 이후 상황에서도 그대로 지속되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이후 자본가계급은 국가의 후원을 받는 존재에서 벗어나 이제 독자적 사회적, 정치적 집단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 지주세력이 '사회적 존재'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제 민주화는 단순히 군부 권위주의 정권의 퇴진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자율성 문제, 대내적으로는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자본의 힘을 어떻게 견제하는가의 문제, 즉 국가와 재벌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의 문제로 집약된다. 재벌 개혁은 재벌의 힘이 어느 정도 국가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가의 문제, 혹은 재벌체제의 개혁 문제로 이전되어 가기 시작했다. 최장집이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문제는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체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최장집, 1996:303)고 말한 것도 민주주의의 경제, 사회적 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 3. 한국의 중간계급

한국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주장은 급속한 자

---

9) 박광주, 앞의 책, 621쪽. 그러나 이러한 단언은 상당한 실증적인 조사를 필요로 한다. 구해근은 최근의 그의 저서에서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신분획득을 위한 열망으로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그에게서 계급과 신분의 문제는 다소 애매하게 처리되었다(구해근, 2002).

본주의 산업화의 결과 광범위한 도시 중간층이 성장했고, 이들이 군부 권위주의 체제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서 민주화는 불가피한 대세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87년 6월 항쟁은 바로 중간층의 항의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실제 6월 항쟁 당시 국민운동본부 발기인의 구성을 보면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중간계급에 속하는 종교인, 재야단체 지역대표, 여성계, 문화예술계 등이 발기인 2,191명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했고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발기인은 210명에 불과하였다(윤상철, 1997,131). 공동대표나 집행위원장의 경우에도 그러한 경향은 두드러졌고, 심지어는 중상계급인 대한변협의 변호사들도 대표단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6월 항쟁 당시의 가두시위에 상당수의 화이트칼라들이 참여했고, 이들의 '비폭력 평화노선', 철저적 민주주의의 정상화 요구가 광범위한 중간층의 공감을 일으켜 이 가담이 군사정권으로 하여금 무력의 사용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87년 이전과는 분명히 다르지만 1989년 이후 권위주의 체제의 회귀과정에 과연 87년 당시 민주화를 지지했던 중간층이 일정한 견제력을 행사했는가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흔히 지적되는 중간층의 이중성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특히 89년의 전교조 해직 사태, 90년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 전후 노태우 정권의 공안정국 조성과정에서 노골적으로 사용된 억압적 지배체제는 민주적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중간층은 이에 대해 침묵하였으며, 구시대적 억압 방법이 그대로 관철될 수 있었다. 85년 2.12 총선에서 드러난 중간층의 야당에 대한 지지 성향과 87년 6월 항쟁 당시 도시 중간층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지와 89년 이후 중간층의 침묵은 한국의 중간층이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노동세력에 대한 탄압, 안보를 빌미로 한 억압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더 엄밀하게 과연 중간층이 자신이 전혀 '희생'을 입지 않을 수 있는 선거 시의 투표행동을 제외하고 '희생'을 수반할지도 모르는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는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 성격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이들이 과연 하나의 '집단' 혹은 '세력'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궁극적인 물음을 던질 수 있다.

국민운동본부의 구성원이 주로 중간층 출신이라는 지적도 제한적으로만 타당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의 출신 계층, 계급적 귀속성보다는 오히려 87년 이전부터 민주화 운동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된 민통련 관계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에서 학생들의 시위를 중간층의 시위라고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 한국 중간층 특유의 가치관이나 정서라기보다는 사회운동에 가담한 데서 오는 유대의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국민운동본부는 분명히 노동자 계급과는 거리가 먼 구성원자들로 조직된 것이지만, 말 그대로 무정형의 국민을 대표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구성원 중에서 실제 생산현장이나 특정의 기업 등 이해관계에 연관된 조직이나 집단에 소속된 보통의 중간층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하다.

6월 항쟁 당시 중간층의 지지는 분명히 6.29 선언을 이끌어낸 매우 중요한 힘의 원천이었지만, 자본주의 발전이 일정한 시점에 이른 당시 도시 중간층의 지지가 과연 79년 부마사태나 80년 광주민주화 운동, 그리고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 아직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되지 않아서 도시의 화이트칼라층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았던 1960년 4.19 당시 도시 중간층의 지지와 얼마나 다른 특징을 갖고 있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4.19 당시부터 도시 중간층은 여론형성을 통해서 독재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고, 독재정권을 양보하게 만드는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해 왔다. 그래서 민주화는 분명히 중간층이 이반했을 때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의 '이반'은 이념적·조직적 리더쉽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적극적 혹은 소극적인 행동을 수반하지는 않았다. 6월 항쟁 당시가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넥타이 부대'가 직접 행동에 참가했다는 점인데, 이 넥타이 부대를 '계층, 계급적 성격'을 가진 존재로 볼 것인지, 아니면 70년대 이후 학생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세례를 받은 '세대' 범주로 볼 것인지는 논란거리가 된다.

1990년 6월의 조사를 참고하면 중간층은 대체로 3공화국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견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3공화국이 “정치경제적으로 공로가 크다”(23%), 혹은 “정치적 과오가 있었지만 경제성장의 공로가 크다”(69%)라고 보고 있는데(홍두승, 1992: 271), 그것을 보면 이들이 왜 90년 당시의 공안정국 조성에 침묵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독재, 반민주, 반인권에 대해 비판적이기는 하나, 안보 혹은 성장의 문제에 더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가치와 안보가치가 충돌할 경우 후자를 선택할 자세를 갖고 있었다. 즉 민주화의 대의를 긍정하더라도 정부가 그러한 저항세력이 안보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강하게 탄압할 경우 운동세력의 편을 들기보다는 정권의 편을 들 가능성을 더 많이 갖고 있었다. 이것은 한국의 중간층이 하나의 세력을 형성해서 민주화를 주도하기보다는 단지 배후의 여론집단으로만 존재하며 무정형의 집단으로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왔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존스(Jones)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중간층이 획일적인 국가교육, 유교문화의 영향 때문에 서구의 중간층과는 달리 자유주의적이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Jones, 1988). 그는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중간층이 민주주의를 철저히 옹호하기보다는 ‘질서’를 강조하고, 권위주의 정권에 복종하는지를 물으면서 서구의 시민사회 개념이 동아시아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의 부르주아 계급 혹은 중간계급이 국가가 위로부터 민주적 제도를 도입하고, 자본주의적 발전을 주도하는 조건에서 출생 당시부터 독자적 정치적 의견이나 이해집단으로 등장하지 못했으며 유사 봉건제적 지배구조인 억압적인 지배체제 하에서 피해자라기보다는 수혜자였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시민의식과 권리의식, 민주화의 신념으로 무장되지 않았던 존재라는 점은 분명하다. 다이아몬드(Diamond)가 지적하듯이 사회이동이 활발한 사회에서 중간계급은 노동자와 연대하기보다는 상승의 기대, 즉 부르주아를 계속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러한 조건은 중간계급을 정치적으로는 다소 비판적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매우 보수적인 존재로 만들

어준다. 한편 정치문화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중간계급은 이해관계만큼이나 도덕주의의 잣대로 정치현실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중간계급과 자유주의의 상관성, 나아가 중간계급과 시민의식의 상관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우리는 중간층이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하나의 집단을 구성하는가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다. 정영태의 조사를 통해보면 14대 대선에서 중간층은(정영태, 1993) 그 자체로는 어떠한 뚜렷한 투표성향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들은 13대 대선에 비해 보수화된 경향을 보여주기는 하나 자본가, 혹은 노동자계급과 차별적인 지지성향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다른 조사에서처럼 신중간층은 정치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의식이 투표 상황에서는 결국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로 희석되어 버린다. 오히려 중간층 중에서 전문직 종사자들은 진보적인 백기완 후보를 가장 많이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그것은 중간층의 진보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시각을 가진 전문직 일부의 진보성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한국의 선거정치가 기본적으로 계급투표가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만약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도시 신중간계급의 비중이 더 늘어났다는 가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한국의 중간층이 왜 민주주의의 확대, 심화를 지지하기보다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가치를 옹호하면서 점차 자본주의 사회 문화 현실에 안주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권위주의 정권이 지배하던 87년 이전에도 일관된 지향이나 기초를 갖는 '정치세력' 혹은 의미 있는 사회집단으로 존재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 점에서 90년대 이후 시민운동 혹은 NGO 운동의 등장이 광범위한 중간층의 지지 속에서 가능했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을 중간층이 주도한 운동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과거의 민주화운동이 그러했듯이 이들 시민운동 역시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으나 사회적 기반은 대단히 취약하며 민주화 운동의 전면에서 섰던 학생, 지식인,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의 유대를 빼고

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계층, 계급으로서의 중간층이 아니라 중간층의 기반을 가진 '조직화된 운동 집단'인 것이다.

#### 4. 한국의 노동계급

87년 이전까지 한국의 노동자들은 대체로 정치권력에 복종했으며 사업장 단위로 임금투쟁이나 노조설립 투쟁을 전개하였다. 노동자의 탈정치화를 조장한 군사독재는 공식노조를 어용화하되, 이들을 통해 하부의 일반 노동자들을 통제하였다. 정치적으로 노총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는 노총 내부의 보수적 상층 지도부의 폐쇄적 지배블력 강화와 맞물려 있다. 국가의 통제가 강하면 어용 지도부는 조합원들과 괴리되어 갈 수밖에 없다. 79년 YH사건, 80년 사북 지역에서의 파업 시위 등 군사독재의 위기, 혹은 이완기에 노동자들이 거센 저항운동을 벌인 사례가 있지만 이들이 정치적 사안을 매개로 하여 집단적 동원을 감행한 것은 아니었다. 학생주도의 정치투쟁과 노동자들의 경제투쟁은 심각하게 괴리되어 있었다. 이것은 87년 당시 6월 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의 분리로 표면화되었다.

기존의 조사연구는 6월 항쟁 당시 노동자들의 역할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 대해 이견이 없다. 국민운동본부의 구성인자에서도 그러하거나와 운동 전개과정에서도 노동자의 요구나 구호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6월 항쟁 기간에 노동자들은 집단 혹은 조직으로서 참가한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혹은 시민의 일원으로서 참가했다고 볼 수 있다. 브라질을 비롯한 제3세계 군부정권 퇴진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87년 당시 한국 노동자들의 정치적 민주화 과정에서의 역할은 대단히 소극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어용화된 공식노조가 노동자들의 동원을 통제하고, 노동자가 정치적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탈정치화시켜 놓은 6.29 이전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정치적 민주화 과정에서 사실상 어떠한 자발적, 집합적 주체로 등장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 근대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집합적 노동동원 사례인 7.8.9월 대투쟁 당시에도 노동자들의 요구는 작업장 단위의 극히 온건한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이다. 대투쟁이 주로 작업장 단위로 전개되었다는 것은 노동자의 요구의 경제적 성격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 즉 대투쟁은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인 정치질서와도 완전히 절연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노동자 대투쟁이 정치적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3,000여 건 이상의 파업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은 국가경제, 정치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이었으며, 참가자의 주관적인 의지와 무관하게 이것은 한국의 자본가 계급과 지배계급에게 충격을 주었다. 특히 사업장 단위에서 노조설립 붐이 일어나고, 사용자의 전제적 권력이 이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참가 노동자의 주관적 의미 부여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한국의 계급질서, 그리고 시민사회의 밀도, 나아가 정치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8월 중순 이후 공안기관, 검찰과 언론의 강경한 자세와 탄압은 이러한 위기의식의 반영이었다. 즉 노동자 대투쟁은 그 집합성과 파괴력만으로도 한국 사회에서의 민주주의의 경제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자본/노동의 거시적 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킨 것이다.

즉 대투쟁으로 시민사회 내에 중요한 교두보가 마련된 것은 분명하고 그것은 민주주의의 반대세력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의 약간의 개선과 작업장 내 사회적 지위의 변화는 거시 정치적 차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이것은 88년의 노동법 개정투쟁의 좌절로 집약된다. 특히 대투쟁 직후의 13대 대통령 선거와 88년의 총선은 사업장 단위의 경제투쟁과 정치적 동원을 분리시키는 장치로 작동하였으며, 이들은 정치사회에서는 여전히 종업원으로 남아있었다.

노동자는 작업장에서 전제적인 체제가 강화되어 가는 것에 대해 방어적인 저항을 하기는 했으나 작업장 정치를 조건짓는 거시정치와 권력 관계에 눈을 돌리지는 않았다. 즉 노동법 개악이나 탄압 일변도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 수동적인 저항으로 일관하였다. 생존을 위한 노동자의 투쟁은 그 자체가 자본의 전체적 힘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본다면 사회적 역학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힘을 갖고 있다. 잠재적으로 노동자계급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였으나 실제로 이들의 투쟁은 대체로 탈정치적, 경제적 양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대항력이 계급적 역학관계를 변화시키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즉 노동자의 저항은 87년 이전에 그러하였듯이 민주화 운동에서 극히 제한적인 역할만 담당했다. 즉 정치적 민주화 운동과 경제적 민중운동의 괴리, 민주화 운동은 세력적 조직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민중세력은 정치적 힘을 갖지 못하는 이 괴리 현상은 87년 이후에도 여전히 극복되지 않았다.

한국과 유사한 노동운동의 발전 경로를 겪은 브라질과 남아공화국의 경우 노동운동이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단순한 이익집단 운동이 아닌 사회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특히 브라질의 경우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지역운동과 결합하여 지역, 전국적인 차원에서 성공적인 계급정치를 실천할 수 있었다(Seidman, 1994). 남아공의 경우 계급적인 균열을 실제 정치사회를 압도해온 인종주의적인 균열과 효과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민주화 과정에서 노동운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1987년 6월 항쟁 당시 민주화운동에서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못했으며, 그후 전투적 노동운동이 작업장의 불평등 극복과 노동자의 지위 향상에는 적극적으로 기여하였으나 노동운동의 사회운동적 성격은 비교적 취약했다. 이것이 바로 이들 나라에 비해 정치적 형성에서 지지부진한 이유라 볼 수 있다(김동춘, 2002).

한국은 자본주의 공업화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이미 보통선거, 의회와 법원 등 제도화된 민주주의 정치가 수입되어 실천되었기 때문에 동시대의 동아시아, 남미의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출생시 정치적 환경 - 보통선거권의 완전한 확보 - 이 19, 20세기 초 유럽 노동자와는 근본적으로 판이하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노동자가 계급 특수적 이해보

다는 중간계급 및 사회 일반의 요구를 수용하여 자신의 것과 결합함과 동시에, 처음부터 기성의 정치적 대표체제나 지역, 전국 단위의 정치 공간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만 작업장 단위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사회세력화의 지평을 개척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과거 유럽의 경우에서 계급형성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해되었던 경제, 사회 영역에서의 계급과 정치적 영역에서의 계급이 매우 단절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각각의 과정에 미치는 조건이나 변수들도 상이하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운동은 남북한의 분단, 지역주의를 비롯한 기존 한국의 사회, 정치적 균열 축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지역주의와 그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보수정당의 독점구조는 계급정치의 실천과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가로막은 가장 큰 장벽이다(김동춘, 2002).

## 5. 비계급적 범주들의 역할과 한국 민주화운동

90년의 3당 합당, 노동조합법 법안의 폐기, 군 조직법 날치기 처리, 금융실명제 유보 등 90년대 초반 민주화 역행의 제반 사건들은 87년의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이 시민사회 내에서 어떤 조직적 계급적 기반을 갖지 못한 채 추진되었다는 사실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특히 3당 합당은 지지기반을 달리하는 정당간의 연합이나 동맹이 아니라 정당정치인들 간의 타협 혹은 비밀 담합이라 부를 수 있는데(최장집, 1996: 233), 이러한 상층 정치가들의 담합에 의한 3당 합당이야말로 한국 정치가 사회적 계급적 기초를 갖지 못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이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무정형'의 집단을 이루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군사독재 하에서의 민주화 운동의 주체적 동력이 어떠했는가 하는 점이 바로 군부독재 퇴진 이후에도 여전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민주화를 역전시키려는 힘에 대한 일상적 사회적 견제력의 결여, 그리고 민주주의의 확대, 심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정당, 혹은 사회

세력적 기초의 취약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세력적 취약성은 민주화 운동이 우리 재야 지식인의 주도와 학생들의 동원에 기초했다는 사실과 같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국가가 사회에 대해 압도적 우위에 서고, 극우 독재세력이 지배하고, 저항 정치세력이 완전히 소멸된 조건에서 출발했다. 한국에서 '재야' 세력은 정치사회가 국가의 일부분으로 존재하고, 야당이 종종 국가로부터 배제되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은 조건에서 제도 밖에서 정당적 역할을 대신하는 엘리트 세력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재야'의 존재는 한국의 도덕정치(moral politics)적 조건과 연관시켜야 제대로 파악될 수 있다. 계급정치가 사실상 차단된 분단의 조건에서 전근대적인 도덕정치는 새로운 방식으로 재편되어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비제도적인 지식인 정치'의 공간을 열어주었다.<sup>10)</sup> 이 지식인 주도의 재야정치는 '이익정치'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전환기적 정치 사회상황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위로부터의 '이식된 근대화'로 지주 세력이 소멸된 이후 산업사회의 새로운 '계급' 혹은 사회세력이 형성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하기도 했다.

지식인 혹은 정치사회 내의 일부 배제세력의 결집으로서 '재야' 세력은 '시민사회 내의 비시민'인 학생들의 동원과 투쟁 위에서 성립했다. 1960년에서 1987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민주화운동세력은 학생들이었다. 70년대부터 80년대 중간까지의 민주화 운동 관련 수형자들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우선 70년에서 79년 사이 전체 2,704명 중에서 학생과 청년이 1,197명으로 제일 많고, 다음이 노동·농업 관련자가 242명이며, 성직자가 82명이고 종교단체 종사자 50명, 언론인·문인 82명, 회사원·연구원 70명, 교직 52명, 빈민 43명이다. 학생·청년, 성직자, 언론인·

---

10) 도덕 정치는 정치적 갈등의 기반이 집단간의 이해관계에 기초하기보다는 도덕적 명분과 정당성에 두어지는 정치질서를 말한다. 물론 이해관계, 권력투쟁을 도덕적 혹은 종교적 담론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도덕적 포장이 가능한 것도 대중들이 이러한 도덕주의에 기초해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일 것이다. 조선시대의 도덕정치에 대해서는 김상준, 2001 참조.

문인, 교직자를 모두 지식인으로 본다면 70년대 민주화 운동은 지식인과 준지식인인 학생들에 의해 추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세력의 비중은 적어도 구속자 수에 관한 한 10%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80년에서 85년 사이에는 전체 구속자 3,291명 중에서 학생과 청년이 1,981명, 성직자가 6명, 종교단체 종사자가 23명, 언론인·문인이 35명, 교직이 53명 등을 차지하고 있으나 노동·농업이 490명을 차지하고 있어서 학생·청년의 비중이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70년대에 비해서는 줄어들고 그 대신, 민중세력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11)</sup> 결국 70년에서 85년 사이 민주화운동은 학생, 청년, 지식인 등 생산현장과 시민사회 내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거리를 둔 집단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물론 87년 6월 항쟁 당시의 최대 동원세력도 학생이었다. 서울의 일부 화이트칼라를 제외하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대도시에서 발생한 시위는 학생들에 의해 조직되고 그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렇다면 도시 중간계급, 학생, 혹은 재야세력은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결합되어 민주화의 성과를 얻어내는가? 우선 이들의 공통점은 교육 받는 층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둘째로 이들을 특정 정치적 국면에서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이들의 '이해관계' 보다는 '도덕적 명분' 및 매우 느슨한 형태로 존재하는 독재에 대한 거부와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라는 점이다. 지식인 지배자/ 저항 지식인(성균관 유생, 재야 학자)의 동원의 정치패턴은 이미 조선시대부터 존재했는데, 이것은 '백성'의 완전한 배제와 탈정치화라는 조건 속에서 가능했다. 백성들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불만과 정치적인 의견을 이들 '저항 지식인'에게 위임하였고, 저항 지식인은 자신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명한 사명감과 도덕적 의무감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배운 사람의 책무'를 느낀 전통적 정치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의 이들 저항 엘리트의 개인적 집합적 항의는 근대사회

11) NCC인권위원회, 『197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 3, 2067-2068

에 들어서서 지식인, 학생들의 저항으로 변형되었다. 이들의 저항은 무정형의 대중들의 '민심 이반'의 힘을 입어 정치변동의 동인으로 작용했는데, 1960년 4.19를 계기로 하여 '민심'은 분명한 행동의 주체로 부각되었다. 즉 도시 중간계급과 저항 엘리트의 결합은 1960년 4.19 이후 1987년 6월 항쟁기간까지 민주화의 주요 동력이었는데, 동력의 기반은 경제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것이었고, 정치적 억압에 대한 비판과 도덕적 분노가 결합된 것이었다. 이 상황에서도 도시 중간계급은 비판적 여론형성의 주역이기는 했으나 행동의 주체는 아니었다. 이들은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 혹은 이완 국면에서 새로운 불만세력과 이익집단이 등장하는 길을 열어주기는 했으나 이들 스스로가 민주화의 직접 참여자로 변신하지는 않았다. 즉 중간계급은 권위주의 정권이 양보조치를 취하자마자 선거 이외의 방법으로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혹은 참여할 방도를 알지 못하는, 무정형의 대중으로 되돌아갔다. 중간계급의 이러한 행동들은 4.19 이후 학생들이 학원민주화 운동, 신생활운동과 통일운동, 87년 6.29 직후에 새로운 정치참여 활동과 통일운동을 전개한 것과 대조적이다. 즉 이익집단을 제외하고 민주화운동의 대의를 계승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의 참여'는 별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중간계급을 민주화 운동의 주도세력으로까지 자리매김 할 수 없는 중요한 지점이다.

결국 외형적으로 볼 때 한국 민주화 운동의 선두에 서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집단, 혹은 세력은 계급적 기초를 갖지 않은 학생, 지식인, 학생운동의 경력을 가진 일부 중간층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과 지식인은 바로 이러한 무정형의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시민사회의 정치적 요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의 정치적 역할은 4.19에서 87년 6월 항쟁까지는 시위, 조직적인 저항운동 등으로 표현되었으며, 90년대 이후에는 일부 진보정치운동으로, 대안적인 운동노선 모색, 그리고 나머지는 시민운동 참여 등의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 과거의 지배질서가 반민주적이고 권위적이라면 그것의 기초는 계급권력에 있다기보다는 계급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국가권력에 기인한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 역시 계급적 기초를 갖기보다는 '국민적 기초'와 '도덕적 기초'를 갖고 있으며, 그 주도세력은 계급 외적인 정치세력 즉 하나의 사회적 범주라 할 수 있는 학생과 지식인이 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 6. '사회적 힘' (social power)의 원천과 민주화의 한계

우리는 87년 이전까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나갔던 사회적 힘이 이해관계의 결집력보다는 무정형의 불만을 동원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주도세력의 '도덕적 힘'에 상당부분 기초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불만에 기초한 반사적 동원을 단순히 전근대적인 방식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다. 학생과 지식인의 주도성은 그들의 정치적 비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민사회 이해관계로부터 가장 멀리 있다는 사실, 그리고 도덕적 순수성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도덕정치'가 고도로 현대화된 한국사회에서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물론 이것은 국가의 사회에 대한 우위,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분리, 중간계급과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정치적으로 결집하지 못하는 정치적 공간 속에서 대단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계급간의 이익의 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무엇보다도 지배계급이 더 충실하게 자신의 이익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87년 이후 이들 사회적 범주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바로 무정형의 도시 신중간계급, 여촌야도의 정치적 성향을 전형적으로 내보였던 도시 거주민 중에서 이제 확실하게 자본 혹은 지배계급의 이익을 일관되게 옹호하는 집단이 형성되는 시기와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87년 이후 정치적 힘의 원천이 되는 '사회적 힘'의 조성과정에서 사회적 균열 선 중에서 지역간의 균열, 지역 내의 유대는 계급적 균열/유대를 압도해왔다.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은 모두가 이러한 지역주

의라는 사회적 힘의 포로가 되었다. 이것은 87년 6월 항쟁이 중간계급의 사회적 힘에 기초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이고,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사업장 단위의 노동자의 힘을 보여주는 데는 성공했지만 작업장 밖의 시민사회로 그 힘을 확대시키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즉 정당과 정치지도자가 권력창출을 위해 위로부터 조성하는 '지역' 이라는 사회적 힘이 아래로부터 맹아적으로 조성되는 '사회적 힘'을 압도한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계급적 결집'을 전제로 하는 진보정치운동은 지식인의 운동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즉 노동자와 일부 중간층의 정치사회적 동원을 전제로 하는 진보정치운동은 선거정치에서 영향력을 획득할 수 없었으며, 시민운동은 대중적 동원을 이끌어내는 데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2000년의 4.13 총선은 한국 특유의 도덕정치의 전통과 80년대적 민주화 운동의 전통이 결합되어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낸 제2의 6월 항쟁이었다.

그러나 '재야', '학생', '지식인' 등 엘리트의 도덕적 자원을 무기로 한 제한적인 정치적 민주화는 이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힘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과 시민사회의 분리를 지속시켰으며, 이들 엘리트가 자기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자원을 곧바로 정치적 자원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러한 엘리트의 변신은 사회적 힘의 정치적 힘으로의 전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는 하나, 그것이 전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한 것이며, 정치사회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았고, 시민사회의 정치적 불신을 오히려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결국 민주화의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최장집은 "신중산층 중심의 시민운동의 때 이른 확산과 노동운동의 일시적 약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현상이다"(1996:356)라고 지적한 바 있지만 1990년 초반 이후 시민운동의 확산은 한국의 중간계급의 정치적 각성과 새로운 방식의 사회참여·정치참여의 확산, 혹은 정치적 역량의 증대를 반영하기보다는 노동계급의 취약성, 노동조합의 이익집단적 성격의 강화에 대한 기존의 저항 엘리트의 새로운 방식의 조직화라 볼 수 있고, 87년 이전까지의 국가 중심주의가 후퇴하면서 생겨난 공간

이 중간계급, 혹은 탈계급적 민주화 담론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의 과거 민주화 운동이 그러했듯이 90년대의 시민운동 역시 중간계급의 확고한 기반 위에서 있지 않다는 말이 된다. 거꾸로 말하면 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성장한 시민운동의 발언권과 영향력은 시민운동 자체의 동력에서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간의 국가/시민사회의 관계, 혹은 지배/피지배 관계 아래에서 자유주의적 이념과 가치를 갖는 중간계급의 목소리, 시민운동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중간계급의 시각과 세계관을 표현하고 있는 시민단체에 실제로 중간계급의 대량 참여가 저조한 사실은 전쟁, 경제위기 등 국가적 위기가 재발할 경우 한국의 시민사회나 민주주의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 의사파업에서 볼 수 있었듯이 강력하게 조직된 이해집단의 등장에 따라 크게 약화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더구나 90년대 이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확산이 진척되면서, 이제 민주화라는 상징은 경제영역, 사회영역에서 힘의 각축의 문제로 변하기 시작했다. 노동조합의 성장에 따라 작업장에서의 민주화는 부분적으로 진척되고 있고,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중앙권력의 독점도 어느 정도 견제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확대는 '시민운동'을 성장시킨 것보다 몇 배의 힘을 재벌과 보수적 언론에게 가져다 주었다. 즉 사회세력 기반을 갖지 못한 민주화운동의 성과는 무정형의 국민들에게는 상징적인 보상만 가져다 주었을 뿐, 시장경제에서 우위를 점하는 세력에게는 본격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88년 이후 계속 반복되는 선거에서 다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권력교체, 물가, 경제안정 등 피상적인 정치경제 쟁점과 지역주의 대립구도에 사로잡혀 있었으나(정영태, 1993) 재벌과 자본은 더더 적나라하게 '이해'를 조직화하였으며 그 결과 민주화의 확대심화 노력은 자유화의 담론에 의해 패배를 거듭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사업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강한 투쟁력을 보여주었으나 정치적으로는 극히 파편화된 존재로 남아 있었으며 지배집단이 유포한 의견을 언론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보수 언론을 통해 여과 없이 받아들였다.

### <참고문헌>

- 구해근. 신광영 역, 2002, 『한국노동자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
- 김동춘. 1994,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과 지배질서 - 안보국가, 시장, 가족」, 한국산업사회연구회편, 『한국의 사회변동』, 한울
- 김동춘. 1995, 『한국사회 노동자연구』, 역사비평사, 1995
- 김동춘. 1997, 「1980년대 민주변혁운동의 성장과 그 성격」, 학술단체협의회 편, 『6월 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1, 당대
- 김동춘. 2000, 「민주주의와 시민단체, 시민운동」, 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 제1회 민주주의 포럼
- 김상준. 2001, 「조선시대의 예송과 모랄 폴리틱」, 『한국사회학』, 제35집2호 (2001)
- 김준. 1990, 「1980년의 정세발전과 대립구조」, 정해구 외, 『광주민중항쟁연구』, 사계절.
- 뤼시마이어 외, 박명림·조찬수·권혁용 역,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 나남출판, 1997.
- 마티 하트 랜즈버그. 1999, 「5.18의 교훈, 민주적인 발전 촉진하기」, 학술단체협의회 편, 『5.18은 끝났는가』, 푸른 숲
- 박철규. 1999, 「5.18 민중항쟁과 부마항쟁」, 학술단체협의회 편, 『5.18은 끝났는가 - 5.18 민중항쟁과 한국사회의 진로』, 푸른 숲, 179 쪽
- 서울노동운동연합. 1986, 『선봉에 서서-6월 노동자연대투쟁의 기록』, 돌베개
- 손호철. 1999,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정치』, 푸른 숲
- 신동아 편집부. 1990, 『선언으로 본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동아일보사
- 윤상철. 1987,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이행의 과정』,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남영 편. 1993, 『한국의 선거』, 나남
- 이신행. 1997, 『한국의 사회운동과 정치변동』, 민음사

- 이태호. 1984, 『80년대의 상황과 논리』, 아침, 1984.
- 이태호. 1986, 『노동현장의 진실』, 금문당
- 이호선. 1988, 「사회개혁과 중간집단의 역할」, 일랑 고영복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사회운동과 사회계급 - 일랑 고영복 교수 화갑기념 논총 1』, 전예원
- 임영일. 「한국의 산업화와 계급정치」, 한국사회학회 · 한국정치학회,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1992
- 조현연. 1997, 「6월 항쟁 이념, 주체, 전략」, 학술단체협의회 편, 『6월 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1, 당대
- 조희연. 1992, 「80년대 민주화운동과 체제논쟁」, 『현대한국 체제논쟁사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정영태. 「계급별 투표 행태를 통해 본 14대 대선」,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나남, 1993
- 정해구. 1999, 「한국 민주변혁 운동과 5.18 민주항쟁」, 학술단체협의회 편, 『5.18은 끝났는가 - 5.18 민주항쟁과 한국사회의 진로』, 푸른 숲
-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 최장집. 2000, 「한국 민주화운동의 민족사적 세계사적 의의」, 한국정치학회, 『한국민주화운동의 민족사적 세계사적 의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97, 『우리들의 딸 권양』, 민중사
- 한상진. 1988, 「민중과 중산층의 귀속의식에 관한 연구」, 일랑 고영복 교수 화갑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앞의 책
- 한상진. 1991, 『중민이론의 탐색』, 문학과지성사
- 한완상 · 권태환 · 홍두승. 1988, 『한국의 중간계급 - 이행기의 한국사회 조사자료집』 2, 한국일보사.
- 한홍구. 2001, 「한국 시민사회의 역사성」,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 세계』, 창간호
- 홍두승. 「중산층의 성장과 사회변동」, 한국사회학회 · 한국정치학회,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1992
- Davis, Mike(1986), *Prisoners of American Dream*, Verso/NLB(김영희 · 한기욱 옮김, 『미국의 꿈에 갇힌 사람들』, 창작과 비평, 1994).
- Deyo, Fredrick.(1984) *Dependent Development and Industrial Order An Asian Case*, New York Prager.

- Gellner, Ernest, 1994, *Conditions of Liberty : Civil Society and Its Rivals*, New York: Allen Lane: Penguin Press
- Lipset, Seymour Martin and Gary Marks, *It didn't happen Here: Why socialism Failed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0
- Lyman, Stanford M, ed., *Social Movements, Critiques, Concepts, Case-Studie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5 참조.
- McCarthy, John and Mayer N. Zald, "Resource Mobilization and Social Movements : A Partial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82 No 6, 1979.
- Slater, David, "New Social Movements and Old Political Questions", *Latin American Development*, Spring 1991.
- Jones, David Martin, "democratization, Civil Society and Illiberal Middle Class Culture in Pacific Asia", *Comparative Politics*, January 1998.
- Seidman, Gay W., 1994. *Manufacturing Militance : Worker's movements in Brazil and South Africa, 1970-1985*, Los Ange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Przeworski, Adam, (1985) *Capital and Social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rzeworski, Adam & John Sprague (1986), *Paper Stones A History of Electoral Socialis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Valenzuela, J. Samuel (1989), "Labor Movements in Transition to Democracy A Framework for Analysis", *Comparative Politics*, Vol. 21, No. 4.
- \_\_\_\_\_ (1991), "Labor Movement and Political Systems A Conceptual and Typological Analysis", Working Paper #167, December 1991.
- Webster, Eddie, 1988, "The Rise of Social Movement Unionism: The Two faces of the Black Trade Union Movement in South Africa", P. Frankel et al eds, *Resistance and Change in South Africa*, London: Croom Helm
- Zeitlin, Maurice (1980), "On Classes, Class Conflict, and the State An Introductory Note", *Class, Class Conflict, and State*, Wonthrop Publishers Inc.